

사회보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鄭敬培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우

리 국민은 현재 고통스럽고 끝이 안보이는 구조조정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 구조조정의 긴 터널을 성공적으로 빠져나올 경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겠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난감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고용안정대책 특별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특별자금 등을 활용하여 총 7조 9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재원으로 사업체들을 지원하여 실업자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사태는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모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만, 특히 사회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의 내실화를 기하며 실업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좀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선진외국의 경우 사회보장이 경제난국의 시기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이번 경제위기를 우리나라 사회보장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왜 이렇게 낙후되었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보장에 대한 패러다임 설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성장론자들에 밀려 경제상황이 좋을때 호경기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더 많은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고, 경제가 안 좋을때는

실업자보호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자원배분의 균형과 한국적 공동체의식에 기초한
생산적 복지경제 모형의 개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총력을 기울여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대한 논의를 뒷전으로 미루었다. 또한 그동안 고성장-저실업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결국 우리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을 위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한 바 지금이라도 사회보장을 정착시키려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은 시장경제의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WTO 및 OECD 회원국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움직일 것을 외부세계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과거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일반화된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을 펼쳐갈 여지가 없다. 철저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경제가 움직이고,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역할로 한정되어 가고 있다. 철저한 시장원리에 의해 경제가 움직인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없는 경제·사회조직은 쉽게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조직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경제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실업자가 발생한다. 그런데 만일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면 구조조정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터이고 이는 다시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보장제도는 경제가 시장원리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사회보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

라 정부·기업·민간 모두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번 경제 위기를 벗어나 성숙한 국가로 한 단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생활에 대한 경제적 위험을 줄여나가야 하며 지금도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보장발전을 위한 방안은 국가재정의 제약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서 성장과 복지가 충돌하였으며, 사회보장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성장우선론자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가 적정성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복지재정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추계한 연구자료가 없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연구자료도 미비한 상태이다. 이런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복지와 성장이 상충하는지 아니면 보완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래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고 아울러 재원확보를 위한 논리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회보장발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민적 여론수렴을 도출해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한국형 사회보장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세대간 자원배분의 균형과 한국적 공동체의식에 기초한 생산적 복지경제 모형의 개발이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실업자보호를 포함한 사회보장의 기틀마련을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하다. 본문
끝